

박근혜, 대선판 흔들 변수될까

구속뎀 동정심 자극 보수 결집 가능성...유승민 대안 부상

문재인·이재명 불구속 유리...안철수·안희정 무관 예측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평가할 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5·9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구속 여부에 따른 득실을 따지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양쪽 표심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보수층 표심을 크게 자극, 보수층 결집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다만, 그 결집의 강도를 놓고는 의견이 나뉜다.

정리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비판적이었던 보수층들까지 '너무 심

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선판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 불복으로 이미 강경 보수층이 결집할 대로 결집한 상황이어서 구속 여부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하다.

진보층 표심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권 대선후보군의 지지율 판도를 약간의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보수층 결집 효과를 일으키고 문 전 대표가 주도해온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둔화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속으로 촉발정국이 사실상 '일단락'

했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나아가 대다수 국민이 이제부터는 '어떤 정권교체냐'를 놓고 고민할 경우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더는 상승탄력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전 대표의 대선가도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아이나니한' 분석도 나온다. 정권교체의 요구가 더 강해지면서 문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더 확산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로서는 상대적으로 중도진영으로 확장성을 표방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대부분이다. 사안 자체가 보수와 진보 진영의 결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자로 선명성을 강조해온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불구속 경우 가장 유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어느 주자보다 적폐청산을 강

하게 주장해와 진보진영의 주목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유력시되는 안철수 전 대표 측은 구속 여부 자체가 대선판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속될 경우 문 전 대표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이 강해져 안정감 있는 대안을 내세우는 안 전 대표에게 다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동정 여론을 일으켜 보수층 결집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대선후보가 이미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구속될 경우 보수층 전반적으로 바른정당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5일 대통령 인수위법' 불발

4당 원내대표 직권상정 합의 실패...현행 30일만 가능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30일 5·9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45일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는 개정안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앞서 인수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후보자 제정 문제로 통과되지 않자 이날 회동을 통해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한국당 정태욱 원내대변인은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인수위법은 새롭게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으로도 30

일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그렇게(현행대로) 하기로 민주당에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바른정당 측에서 위원 요소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있다면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4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인수위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었다"며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해주겠다는 국회의장의 약속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일 4당 합의가 안 되면 인수위법을 포기하겠다"며 "이번 입법은 기존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뿐이다.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기존 인수위법으로 30일간 인수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강론' 외친 안철수·유승민...비문연대 일단 잠복

한국당 논의 진전 없고

김종인 현실화 가능성 낮아

5·9 조기 대선구도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정치권 비문(비문재인) 진영이 각자도생에 나서는 흐름을 보이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우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자강론'으로 선화하고, 당내 분위기도 여기에 동조하는 양상이다.

유 후보는 30일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가리켜 "완전히 '도로전박당'이 되고 있다. 이런 세력들에 우리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비난했다. 단일화 우선 협상파트너를 향해 날 선 공세부터 퍼부은 것이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안보·대북 정책의 차이를 들어 단일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국당의 경우 유력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단일화의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고 있지만, 호락호락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 후보를 겨냥 "자구 그러면 2012년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역할밖에 안 된다"고 깎아내렸다.

특히, 비문 진영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공학적 연대'는 없다며 아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안 전 대표는 리얼미터가 27~29일 성인 1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유승민 "열심히 뛰겠습니다"

30일 오전 보결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 포천시 정중군 바른정당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바른정당 현장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유승민 대선후보(가운데)가 당 지도부가 열심히 뛰라며 전달한 운동화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17.4%로 10개월 만에 2위에 올라 '자강론'에 더욱 탄력을 받은 상태다.

국민의당은 인위적 연대보다는 자연스럽게 우파 지지층을 흡수해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양강구도를 만드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문

연대' 및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견제하고 나섰다. 이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갖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연대설은 가능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며 "양당은 사드 문제나 대북송금특검 등의 문제로 부딪히고 있다. 양측의 연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절라 말했다. 그는 이어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와 정운찬 정 총리, 홍성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전날 3차 회동을 언급,

"의식 한 석도 없는 분들이 모인다고 해서 유력한 후보로 부상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불가능한 구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멘토로 불리는 법륜 스님과 만나는 등 비문연대 불씨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홍준표 연대제의 대응 불필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3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민의당과의 연대라면 진정한 영·호남 연대'라고 한 발언과 관련, "구태여 홍 지사에 대해 나쁘게, 좋게 말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홍 지사의 말까지 코멘트하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그대로 두면 이재이(以夷制夷·오랑개로 오랑개를 막는다)가 된다. 오랑개의 칼로 오랑개를 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홍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 국민의당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만큼 굳이 나서서 홍 지사의 언행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표는 또 대선구도에 대해 "보수층이 단결해봐야 25%이고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한 절대 통합이 안 된다"며 "우리 후보 지지율은 4월 5일 20%를 넘길 것이고,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도 10%포인트 범위 내로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7 대선 브리핑

이재오 광주·전남 민생 탐방

대선 출마를 선언한 늘푸른한국당이 이재오 공동대표가 30~31일 이틀간 광주·전남에서 민생 탐방에 나선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광주 양동시장 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난 뒤 광주시당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31일에는 오전 10시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행정구역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분권형 대

통령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없다"면서 "중앙권력은 외치고 내치 담당 총리로 역할을 나누고 행정부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나누는 방식의 분권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순천과 광양, 여수 등지를 돌며 민생탐방을 이어 갈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